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 호외

1994. 8. 24

발행처 · 전국장애인가족협회/발행인 · 황광식/편집인 · 김종환/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65-1 대송빌딩 3층/전화 · 749-0343~4, 749-3268~9

서울지부/김철호지부장 (02)441-6558 · 경기지부/노민규지부장 (0342)736-4927 · 대전지부/오선석총무 (042)631-4871 · 강원지부/배문주지부장 (0391)43-5231 · 경남지부/허종수지부장 (0522)65-9037 · 광주지부/이정범지부장 (052)522-6151 · 제주지부/남명우지부장 (064)72-3701

## 고용을 하향조정... 장애인들 분노

### 민자당 · 정부 · 기업 의무고용을 1% 하향추진 장애인계 거센 반발, 범장애인 대책기구 촉구

지난 89년 장애인들의 힘겨운 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기업의 의무고용율이 정부와 민자당, 대기업 등에 의해 하향조정되려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9일 경 열린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에서 건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고용분야 항목

에서 현재 3백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현재의 2%에서 1%로 낮추는 안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주요 담당부처인 상공부 산하 기업활동 규제완화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0.39%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고용율을 1%로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장애인복지수준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아 장애인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

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의 담당부처인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직업교육, 고용지원 등 제반사항을 대폭 개선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마련중이었으나, 이번 특별조치법의 개정 추진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소식을 접한 장애인계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분노하고 있다. 본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박탈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최소한의 의무고용율인 2% 기준고용율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3일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기능공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산 장애인직업훈련원에서 열린 제11회 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서 침묵시위를 벌였고, 이번 문제를 타단체에 알려나가며 장애인계의 '범장애인대책기구'의 결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은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두차례의 항의방문과 '(가칭) 범장애인대책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몇몇 법인, 임의 단체들도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개정안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수렴 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중앙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에서 건의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하면서 기업의 고용분야 항목

용율을 1%로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장애인복지수준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아 장애인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

다. 한편 소식을 접한 장애인계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분노하고 있다. 본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의

서 침묵시위를 벌였고, 이번 문제를 타단체에 알려나가며 장애인계의 '범장애인대책기구'의 결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개정안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수렴 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우리의 입장

## 국민의 정부인가, 기업의 정부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명백히 규정된 '사회복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을 치장하기 위한 미사여구일 뿐인가? 우리는 '문민정부'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군부독재의 시퍼런 서슬 앞에선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민주와 복지와 사회정의를 이제는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도 들린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문민정부가 그토록 외쳐대던 개혁의 본질에 대해 하나 하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5·6공 시절에도 철마다 등장했던 국제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해묵은 구호 앞에 노동자, 농민의 요구가 또다시 묵살되고 있다. '복지'라는 단어는 꺼내기조차

두렵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 호언은 어디로 갔는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뿌리조차 사라지고 있다. 얼마전 사회복지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그들 민간 기업의 입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향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는 없으면서 기업활동의 대상으로는 삼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자명하다. 결국 장애인은 '시장'으로서의 가치 이상일 수 없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결코 부당한 주장을 해오지 않았다.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노동력을 가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당장에 선진국형 복지를 내놓으라는 것도, 고귀한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장애인을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을 주장해 왔을 뿐이다. 복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떼어 주었다가 필요하면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복지라는 식의 발상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선 사고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은 장애인에게 있어 최소이자 최초의 권리 획득 과정이다. 직장이 없는 장애인에게, 계단을 내려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 승차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400만 장애인 중 무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제는 우리의 문민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고용촉진법은 법안의 통과와 시행령 발표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장애인의 수가 90만명 수준이라는 가정하

에 적정 기준 고용율 2%가 산출되었고 그나마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의 산출에 의하면 이러한 기준의 시행령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해도, 전체 실업 장애인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만이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도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91년 이후 지금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정부가 발표한 고용의 무인원 3만9천명의 22.3%만이 고용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여전히 장애인의 수를 100만명 미만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용 장애인 중 상당수는 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법의 효과로 추가 고용된 순인원은 1,085명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주장대로

라면 60만명이 넘는 실업 장애인의 600명중 1명 만이 추가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가막힌 결과이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근거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지원제도가 미흡한 점, 그리고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미비하다는 점 등 들고 있다.

과연 그런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의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장애인이 가질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대다수가 숙련공이 아닌 체로 국내에 들어온다. 결국은 장애인의 노동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용촉진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자. "노동 시장에서 불 (2면에 계속)

# '(가칭)범 장애인계 대책기구'를 제안하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기업이 집단의 전면적인 공세는 실로 위협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개별 단체의 소규모 대응이나 항의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처절한 장애인 생존권 투쟁의 현장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범 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투쟁을 되돌아 보자. 당시 공대위에는 상당수의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포함되었으며, 진정으로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 과정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과된 법안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비추어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투

쟁의 마지막 단계인 여의도 국회의원회사당 집회에서 장애인 대중은 장애인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가 참여한 국회에서의 타협 과정은 '의무고용을 1~5%'라는 애매한 문구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다. 결국 이것은 1년후의 시행령 확정시 경영계의 입김이 반영된 '의무고용을 2%'의 관철이 가능하게 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의 공대위는 형식상 범 장애인계 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정으로 장애인 대중의 실질적 요구를 끝까지 수렴해 내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다시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은 장애인 대중을 대변할 만한 실질적 대표기구조차 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급히 범 장애인계 대책 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장애

인계 현황에 대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장애인계에는 장애인 대중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만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 대중의 요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만 하기에 는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나마 장애인 대중의 요구가 최소한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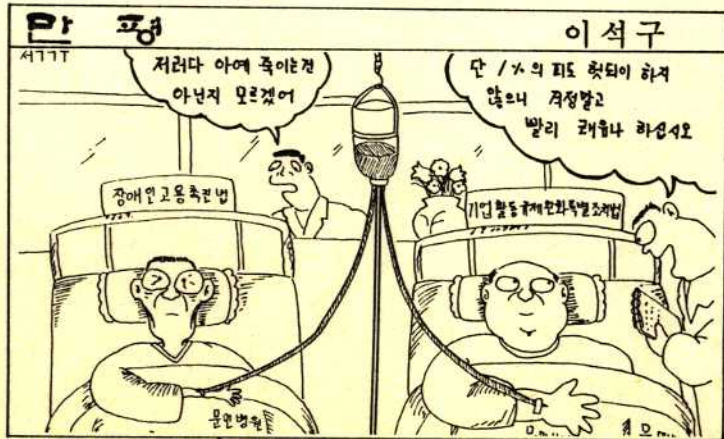
여기에는 장애인 법인 단체, 임의 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 단체, 학생 단체, 장애인 단체, 그리고 부모 단체가 모두 망라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의 내용적 구성은 이들 모두의 의사가 민주적인 형태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89년을 상기하자. 왜 투쟁이 왜곡되었는가. 마지막 단계의 투쟁이 민주적인 의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기형적인 로비의 형태

로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대표기구는 반드시 내용적으로도 대표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번 투쟁은 장애인계의 총체적인 대응을 수반해야 한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영역별, 성격별 제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대응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만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후 정부와 자본가 집단을 상대로한 우리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역량을 축적하는 데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다.

어떠한 형태로도 변질되지 않는 투쟁, 어느 곳으로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일 개인, 일 단체의 입장을 위한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사수해 낼 수 있는 물러서지 않는 투쟁, 이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인계 모두의 발전과 단결을 준비할 수 있는 투쟁, 그리고 진정으로 장애인 대중이 중심으로 우뚝서는 투쟁을 이끌어 내자. 우리 청년 장애인은 이러한 투쟁의 모든 현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범 장애인계 대동단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1면에서 계속)  
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능력에 맞는 일...를 마련해 주어 인간다운 생활을

율을 1%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 장애인계에 시사하는... 매우... 우...!마전... 노동부가 발표한 94~98 장애

달성하고 있는 한해 매출액이 수조에 다하고 있다. 물론 자본...의...대로라면 단 1%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화살의 방향이 뒤바뀌고 있다. 경제 정책이 오류는 보다 본질적인 경제 구조의 분석에...선 위임을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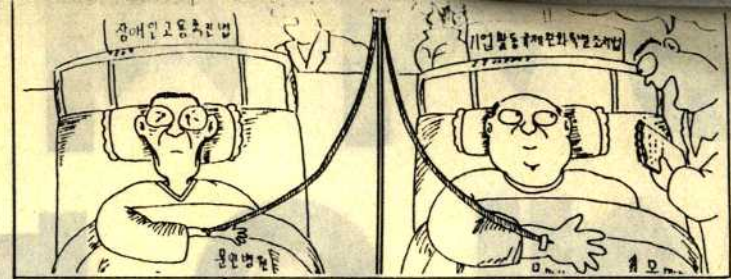
서만 자본을 살찌우는 이런 정책이 진정한 '경제정책'을 강화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 과정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과된 법안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비추어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투

쟁을 대변할 만한 실질적 대표 기구조차 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급히 범 장애인계 대책 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장애

모두의 의사가 민주적인 형태로 수립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89년을 상기하자. 왜 투쟁이 왜곡되었는가. 마지막 단계의 투쟁이 민주적인 의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기형적인 로비의 형태



**(1면에서 계속)**

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부가 말하는 취지이다.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장애인, 가지고 있는 신체적 불리와 교육의 미비 등은 시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직업재활 서비스 문제의 경우 법 시행령의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예상된 한계였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분석과 준비의 방안은 결코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대목이다. 기업이 부담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발견도 아니요, 굳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해서야 알 수 있는 어려운 경험도 아니었다.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시행 의지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1%가 경제를 살린다?**

정부와 민자당이 발표한 소위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의 ...로 ...의 ...

율을 1%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 장애인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선, 얼마전 노동부가 발표한 '94~98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의 뒤늦은, 그리고 그나마 제한적인 장애인 고용의 개선 전망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 의하자면 소요 기금의 대부분을 기업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이제 노동부의 계획은 또다시 4년 후에 반성문으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1% 하향조정의 논리는 '현실화'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율이 고용의무율을 한참이나 밑도는 0.39%이므로 의무율을 1%로 낮추어도 장애인 고용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궤변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노출인데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

나아가 3년간 적립된 980억의 부담금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논리의 근거는 ...인가 ...의 ... 기업이

달성하고 있는 한해 매출액이 수 조에 달하고 있다. 물론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단 1억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장애인의 생존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이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산업인력 확보에 재투자되는 셈이 아닌가. 우리는 최소한의 이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자당이 이를 그대로 수렴하여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기업을 향한 귀만 열려있는가. 민자당의 장애인 복지는 선거철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가.

하나의 정부에 속한 부서들이라면 일말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계획이 발표된지 채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순간 순간의 '정책'만 있고 일관된 '정책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총체적 무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고용촉진 시책이 벽에 부딪히면 보사부, 교육부,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차원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나가야 하지 않느냐.

회살의 방향이 뒤바뀌고 있다. 경제 정책의 오류는 보다 본질적인 경제 구조의 분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한 규제완화인가?**

지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있다. 전세계적으로 거대해지는 자본의 힘이 국가를 축소시키고,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들을 풀어 헤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논리에 밀려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분야의 후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자가 참아야 하고, 장애인이 차별되어야 하고, 환경이 훼손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라는 논리도 양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질적투자에 대한 보증 없이 규제완화라는 단기적인 방편을 내놓는 것, 특히 장애인, 환경, 산업안전 등의 국민적 생존에 관한 부분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걸맞지 않다. 단번적인 측면에

서만 자본을 살찌우는 이런 정책이 진정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규제는 제정되는 것보다 푸는 것이 쉬운 데도 지금 타당성의 검토없이 정부는 기업이 요구하는대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규제들을 풀어버리려고 한다. 여당이라고 하는 민자당이 이를 부추긴다. '정책목적'을 저해하지 않고는 철폐할 수 없는 극히 민감한 규제까지 풀어버린다고 당당히 내세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더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이성적인 판단마저도 포기한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신적인 복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실행까지 이어지겠는가.

지금은 고용촉진법이 그렇지만, 이후 교육, 편의시설, 의료, 생활보장 등 어느 것 하나 지금의 경제논리로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고,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삶이 경제논리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가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은 장애인이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